

# 시민 이용 제한... 학교 전기차 충전소는 '그림의 떡'

광주 초·중·고 8곳 설치... 이용 저조  
교직원 전용·이용시간 제한 규제  
시의회, 시교육청 설치 예산 삭감  
정문 개방 여부 이용 활성화 관련



10일 오후 방문한 북구 삼각동 한 고등학교. 충전 구역에 충전 목적이 아닌 차량이 주차돼 있고 충전기 옆에 쓰레기, 재떨이 등이 널브러져 있다.

2022년 1월 '친환경자동차법(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전기차 충전소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내 충전소는 시민의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학교가 이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어 공용 충전소가 교직원 전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총 8곳으로 교직원 전용(비개방) 구역 4곳, 이용시간 제한(개방) 구역 4곳이다. 이용 시간은 오전 8~9시부터 오후 5~6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지난 10일 오후 북구 매곡동 한 고등학교. 수업이 한창인 시간임에도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에 충전 중인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전기차 충전 관련 애플리케이션으로 해당 충전소의 충전기 정보를 살펴보니 완속은 하루 전, 급속은 14일 전이 마지막 충전이었다. 이용자 제한이 없는 '개방 지역'이지만 이용률은 현저히 떨어졌다.

60대 경비원 심모씨는 텅 빈 전기차 충전소를 가리키며 "6개월 동안 외부 이용자는 딱 한 번 봤다"고 말했다.

심씨는 국고를 들여 설치한 충전소가 교직원 전용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전기차 이용자라도 학교 내부 충전소는 불편할 것 같다"며 "교문 밖에 충전소가 있으면 모를까 일단 교문에서 차량 출입을 제한하니 외부인은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또 교문을 닫는 야간에는 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용으로 만들어진 충전소라면 교직원이 아니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학교 내에 충전소를 만드는 것은 실속 없는 행정이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찾은 북구 삼각동 한 고등학교의 전기차 충전소 상황은 더 심각했다. 해



10일 오후 방문한 북구 매곡동의 한 고등학교 전기차 충전소. 외부인 개방 구역임에도 이용자가 없어 충전소가 텅 비어있다.

당 고등학교 경비원에게 전기차 충전소 위치를 묻자 "여기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었나"라며 반문했다.

이곳 충전소에는 충전 목적이 아닌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충전기 옆에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쓰레기통, 재떨이가 있었다. 2, 3일 전이 마지막 충전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자동차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해 전기차 소유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 필수 설치 대상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공이용시설은 주차 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됐다.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학교도 공공 시설에 포함돼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사항이 됐다.

충전소 설치를 늘려 모든 전기차 이용자가 편하게 충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대부분 학교는 위험 노출 등의 이유로 외부인에게 충전소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의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48개 학교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광주시의회 상임위의 제동에 걸렸다. 교육청은 올해 충전소 설치를 위해 14억1000만원을 편성했으나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대부분 학교가 정문을 개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교직원들의 주차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학교 개방 여부가 전기차 충전소 이용 활성화의 관건이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법적으로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공공시설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매년 환경부 보조사업 사업자를 선정, 사업자가 충전소 부지를 찾아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부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설치를 승인한다"며 "공용충전기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부인 출입으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공동주택과 학교는 예외로 이용자 및 개방 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나다운수습기자 dawoon.na@jnilbo.com

## 광주교육청, 5·18 왜곡 바로잡은 초등생 교육감상 수여

광주시교육청이 13일 5·18 왜곡 게임을 신고한 초등학생에게 교육감상을 시상한다.

해당 초등학생은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가상현실 게임을 한 언론에 제보해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이에 해당 게임을 서비스한 게임사는 이 게임을 삭제 처리했고, 5·18기념재단은 지난 8일 게임 제작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정의로운 행동을 실천한 초등학생에게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하기로 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삶 속에서 실천한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또 해당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5·18 교육자료 꾸러미'를 전달하고, 더불어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5·18정신을 상징하는 '5월 주먹빵'을 전달하기로 했다.

학생의 부모는 광주시교육청을 통해 "아이가 5·18 역사 왜곡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제보한 것이었다"며 "의로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로 힘들어하는 모습에 안타까웠는데, 광주시교육청에서 격려와 지지를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대학 신입생 중도탈락 비율 증가

### 부풀리기 의심 대학 감사 청구

광주·전남 대학교 신입생들의 중도탈락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전남 4년제 일반대학교 21곳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도탈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신입생의 11.8%에 해당하는 2570명이 중도탈락했다.

2020년은 6.4%, 2021년에는 9.7%를 기록했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도

탈락 학생의 구체적인 사유로는 △자퇴(54.5%)가 가장 많았으며 △미등록(45.2%) △기타(0.3%) 순으로 나타났다.

미등록은 학교에 등록하지 않아 제적된 학생을 뜻한다.

앞서 전남의 A대학은 지난달 총장 등 교직원들이 학생 충원율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대 정부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신입생의 경우 입학한 것처러 꾸며놓고 다음 학기에는 미등록 등 제적처리하는 수법을 써서 충원율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모임은 이번 현황 분석을 통해 자퇴보다 미등록 학생이 더 많은 대학 5곳에 대해 신입생 부풀리기가 의심된다고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정부지원 등 목적으로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면 더 큰 사학비리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며 "신입생 부풀리기가 의심되는 주요 대학을 감사 실시해, 정상적인 학사운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GREEN GOONG PRIME EVER 120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